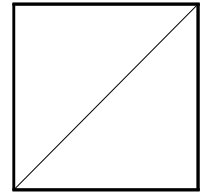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 호	보 고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6. 30. (제 13 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 운영방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1. 6. 30.

1. 보고주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업무의 운영방안을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증선위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8)」 ('18.11.1. 시행)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9)」 ('18.11.1. 시행)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운영방식

□ (감리 대상)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시 회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실시

- 회사의 중대한 회계기준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 재무제표 감리 착수 대상인 '고의' 또는 '중과실' 위반행위

□ (감리 시행) 재무제표별·회사 규모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도입 시기를 달리하고 도입 초기 계도위주 운영 후 본격 감리 실시

- 개별·별도재무제표의 경우 회사 규모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3년을 계도 위주 감리대상 회계연도로 운영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회사 규모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년을 계도 위주 감리대상 회계연도로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개별·별도 재무제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ICFR 감사	검토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 2조원	ICFR 감사	검토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 5천억원	ICFR 감사	검토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ICFR 감사	검토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연결 재무제표]

자산 규모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조원 이상	ICFR 감사	-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 2조원	ICFR 감사	-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 5천억원	ICFR 감사	-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ICFR 감사	-					감사 의무화*					
	ICFR 감리						제도 위주		본격 감리			

*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를 감안('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예정)

나.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단계별 세부 운영방식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는 제도위주 운영 후 본격 감리 실시하며, ①감리 착수 사유, ②감리결과 조치 적용에서 제도 위주 운영과 본격 감리 실시는 차이

(1) 제도 위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세부 운영방식

□ (감리 착수) 재무제표 감리를 받는 회사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회계기준 위반(위반동기 '고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 (감리 방식)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 관련 통제 위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중요한 취약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또는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에 존재
[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문단 6 (i)]

- (감리 조치) ‘개선권고’ 위주로 회사를 조치하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조치 가중*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 등의 가중 가능
[외감규정 [별표 7] 3.가.6)]

(2) 본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의 세부 운영방식

- (감리 착수) 재무제표 감리를 받는 회사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회계기준 위반(위반동기 ‘고의’ 또는 ‘중과실’)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 (감리 방식)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중요한 취약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

- (감리 조치) 회계기준 위반행위의 가중사유 적용 및 개선권고 조치

-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 등의 가중 가능
[외감규정 [별표 7] 3.가.6)]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회사에 ‘개선권고’ 조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연도는 위법동기와 무관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더라도 가중하지 않음

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 운영방식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는 현행 감사인에 대한 감리와 동일하게 재무제표 감리 병행 방식과 감사인 감리 병행 방식으로 운영

(1) 재무제표 감리 병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

□ (감리 착수)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와 병행하여 감사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에 착수하는 경우

○ (제도 위주 감리기간) 회사의 '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에 대해서도 감리 착수

○ (본격 감리기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에 대해서도 감리 착수

□ (감리 방식)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중요한 결함* 여부 확인

*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

○ 제도 위주 감리기간에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본격 감리기간부터는 점검범위 확대

□ (감리 조치)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동기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

*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외감규정 [별표 7] 1.나.1).나]

- 감사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 판단에 고려하더라도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조치 가중사유*로 적용

*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가중 가능[외감규정 [별표 7] 3.가.7)]

(2) 감사인 감리 병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감리

- (감리 착수) 표본추출결과 등으로 감사인 감리 대상에 선정되어 감사인 감리에 착수하는 경우
 - 감사인의 ❶품질관리시스템 점검 및 ❷개별 감사업무 점검으로 구분하여 감리업무 수행

(가)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 (감리 방식) 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점검 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을 점검
- (감리 조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미흡 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해 개선권고

(나) 개별 감사업무 점검

- (감리 방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기준서 1100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

* 제도 위주 감리기간에는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본격 감리기간부터는 점검대상 및 범위 확대

- (감리 조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제도 위주 감리기간에는 '개선권고' 조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에 고의적인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별도 조치

- 본격 감리기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에 따라 조치

*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

**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하여 기본조치로 중과실 V 단계를 부과할 수 있고,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 가능(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1] V.8.)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관계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회계 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2. 제23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3.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법률제15022호, 2017.10.31.>]

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적용한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를 말한다.

1. 유한회사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3. 그 밖에 회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

②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5. (생략)
6.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8. (생략)

③~⑩ (생략)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 제8조에 따라 운영했는지에 대한 감리(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4. (생략)

1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감사인에 대하여 감리 또는 평가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감사인 감리등"이라 한다)

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나. 금융감독원장의 감사인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감사인

16.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회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업무(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회사 감리등"이라 한다)

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다. 금융감독원장의 회사 감리등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회사

17.~22. (생략)

③~⑧ (생략)

[부칙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⑦ (생략)

⑧ 감리집행기관은 재무제표 감리 또는 재무제표 심사를 받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경우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등을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법 제29조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 또는 고발등(이하 "조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동기
2. 위법행위의 중요도
3. 조치등의 가중·경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제표 심사(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조사자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대한 수정공시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경고
2. 주의
3.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취약사항의 해소 등 위법상태를 시정하거나 다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권고

④~⑦ (생략)

[별표 7] 조치등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위반동기

가. (생략)

나.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본다. 다만, 위법행위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본다.

- 1)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缺)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 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금액이 중요성 금액을 4배 이상 초과한 경우
 - 나)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전반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감사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별도로 작성한 내용인 경우
 - 다)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거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조치등의 가중·감경

가. 가중사유

1)~5) (생략)

6)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8.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 특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의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중과실 V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회계법인인 감사인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중과실 V 단계 해당 지정제외점수를 포함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절차 위반행위의 개수가 2개(감사절차가 재무제표상 복수의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고 성격상 각각의 감사절차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개의 감사절차로 본다)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이 없는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한 조치와 중과실 V 단계 조치(감사절차위반 행위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단계 가중한 조치) 중 중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연 락 처	02-2100-2692	02-3145-7702